

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

#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



경 상 남 도  
(감사위원회)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	3
III. 감사결과 .....	4
1. 감사결과 총괄 .....	4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4
1) 성과연봉 산정·지급 부적정 .....	5
2) 맞춤형 복지비 등 지급 부적정 .....	9
3) 채무감면 및 채무분할상환 업무처리 부적정 .....	12
4)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	16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공사·용역 계약 등 회계 취약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 업무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및 집행, 기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에 앞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및 언론 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22. 5. 24.부터 5. 30.까지 5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2. 5. 30.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 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

### 1. 일반 현황

- 설립현황 : '96. 5. 법인 설립 등기
- 위      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4층
- 설립목적 : 사업자의 채무보증으로 자금유통 원활화 도모 및 신용  
정보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통한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 2. 조직 및 인력

- 조      직 : 경영지원본부 등 2개 본부(13개 지점)
- 인      력 : 정원 118명 / 현원 112명

### 3. 재정 현황

- 예      산 : 383,472백만 원(2022년도 경영공시 기준)
- 출 연 금 : 30,240백만 원(도 출연 3,000백만 원)

### 4. 주요 사업

- 지역경제성장 활성화
-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
- 지속성장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 Ⅲ.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하였고, 향후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표] 감사결과 총괄

구분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 원)				
	계	시정	주의	통보	경고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감액	부과
계	6	1	4	2	0	5	0	0	5	1,626	1,626	0	0	0
처분요구	4	1	2	2		5			5	1,626	1,626			
현지조치	2		2											

####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명세 : 붙임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통보

제 목 성과연봉 산정·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조 치 기 관 (재)경남신용보증재단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고 함)에서는 연초 직원들의 성과연봉을 산정하여 이사장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통보된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Ⅲ. 직원의 인사 ⑥ 성과관리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 지급, 승진·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21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3. 성과급 제도 (1)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에 따르면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연봉 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직전년도 개인별 근무 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토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보증재단 「보수규정」 제15조(기준연봉) 및 제16조(기준연봉의 계산)에 따르면 기준연봉은 직급 또는 등급에 따라 1년간 지급하는 기본적인 급여로 [표 1]과 같으며, 기준연봉 월액은 “[직전년도 기준연봉 × (1+(기준인상률)) + 성과연봉가산액] ÷ 12월”이고 성과연봉가산액은 직전년도 개인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서 [표 2]와 같이 평가등급별 가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당해연도에 직원이 승급 또는 승진할 경우 가산금액<sup>1)</sup>을 포함하여 기준연봉을 재산정하도록 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기준연봉 30,000천 원인 A 직원이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S등급을 받아 2020년도 성과급을 8,000천 원 받았고 2021년도에 4급 2등급에서 4급 1등급으로 승급할 경우 2021년도 연봉산정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A의 2021년 연봉산정액 : 2020년도 기준연봉액(30,000천 원) × (1+(기준인상률 2%일 경우)) + (8,000천 원 × 7%) + 승급가산액(4,131천 원) = 35,291천 원

[표 1] 보증재단 기준연봉표 중 일부

(단위 : 천 원)

구 분		연봉범위	
		하한	상한
1급		71,000	106,920
2급		66,000	96,120
3급		63,830	93,776
4급	1등급	56,599	86,122
	2등급	52,564	75,020
5급	1등급	49,191	63,009
	2등급	44,013	63,009
	3등급	40,647	63,009
	4등급	32,906	43,497
6급 이하 생략			

1) 4급 2등급에서 4급 1등급으로 승급할 경우 4,131,840원을 가산하여 연봉에 산정하는데 이렇듯 보증재단에서는 호봉제 보수체계에서 사용하는 승급제도를 연봉제와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2] 성과연봉가산액 등급별 가산율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비율	10%	25%	30%	25%	10%
성과연봉가산율	7%	5%	3%	0	0

한편 보증재단 「성과상여금 운영기준」 제2조의2(지급제외)에 따르면 직원이 중징계처분 및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인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증재단 ○○○에서는 기준연봉에 더해지는 성과연봉 산정 시 개인별 평가등급은 직전년도의 성과평가 등급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등 징계처분 대상자는 다음연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보증재단 ○○○에서는 기준연봉에 더해지는 성과연봉 산정 시 성과연봉가산액의 평가등급을 직전년도 개인별 성과평가 등급이 아닌 직전년도 성과상여금(성과급)을 받은 등급인 전전년도 성과평가 등급으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보증재단의 성과연봉은 직전년도의 성과평가 등급이 아닌 2년 전의 성과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2021. 5. 12. 음주운전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급 ○○○)의 경우 2022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퇴사한 직원<sup>2)</sup>들은 성과연봉을 받지 못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보증재단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성과연봉가산금이 직전년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2019년 9월 입사하여 2020년 6월과 11월에 각 퇴사한 ○○○, ○○○ 직원과 2020년 3월 입사하여 2021년 12월에 퇴사한 ○○○, ○○○ 직원의 경우 성과연봉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퇴사함

**조치할 사항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3. 성과급 제도

(1)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에 위반되지 않도록 성과연봉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맞춤형 복지비 등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조 치 기 관 (재)경남신용보증재단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고 함) ○○○에서는 임직원의 복지수요 충족과 근무조건 개선 등을 위해 내부 규정에 따라 합숙소 운영(월 임차료 지원) 및 맞춤형 복지비(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증재단 「규정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구분) 및 제15조(규정의 효력 순위)에 따르면 “규정”은 재단의 조직, 운영 및 업무수행 등의 기본이 중요사항을 정한 기본적 준칙을 말하고, “요령”이란 규정에 의하여 위임되거나 규정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업무수행의 준칙을 말하고, “기준”이란 규정 및 요령에 의하여 위임되거나 규정 및 요령의 시행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 또는 업무처리 절차나 방법 등을 정한 업무수행의 준칙이라고 하면서 규정은 정관, 업무방법서, 이사회규정, 직제 및 정원규정, 직무전결규정, 기타 일반규정, 요령, 기준의 순위로서 하위규정을 구속하고, 상위규정에 저촉되는 하위규정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증재단 「복지규정」 제2조(적용대상), 제10조의3(합숙소 설치 및 운영) 및 제11조의4(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르면 당해 규정은 임원, 직제 및 정원규정

제3조에서 정한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임직원의 복지수요 충족과 근무조건 개선 등을 위해 합숙소 운영, 월 임차료 지원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증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3조(직원)에 따르면 직원은 일반직원과 서무직원, 특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직원과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별도직무에 종사하는 별도직무직원으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같은 규정 제3조의2(단기근로인력)에는 단기근로인력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운전, 단순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보증재단 「합숙소운용요령」 제6조(입소자격), 제18조(임차료 지급) 및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합숙소 입소, 월 임차료 지원 및 맞춤형복지제도 지급대상을 직제 및 정원규정 제3조의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한편 보증재단 「정관」 제16조(이사회의 기능)에 따르면 재단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증재단 ○○○에서는 ‘규정’과 그 하위규범인 ‘요령’과 ‘기준’ 등이 상충되지 않도록 「복지규정」을 개정한 후 「직제 및 정원규정」 제3조의 직원 외 단기근로인력(기간제) 등에게 맞춤형 복지비(복지포인트) 및 합숙소(월 임차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보증재단 ○○○에서는 「복지규정」의 개정 절차 없이 “규정”보다 하위규정인 「단기근로인력 운용기준」 제17조(맞춤형 복지제도)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은 재단 「복지규정」 제11조의4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단기근로인력에게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1,050천 원(기본포인트 800천 원 + 건강검진 250천 원)을 기본포인트로 제공하고 이에 개인별 근속포인트 및 가족포인트까지 가산하여 배정·지급하였다.

또한 「단기근로인력 운용기준」 상에 전혀 규정된 바가 없음에도 2020. 4.부터 당시 단기근로인력인 ○○○○○○ 소속 ○○○<sup>1)</sup>에게 2개월간 임차료 60만 원을 지원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보증재단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통보」(2019.3.7.)와 기간제법 제2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재단 규정을 개정하는 중 업무처리 미숙으로 상위규정인 복지규정이 아닌 단기근로인력 운용기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기간제 직원 ○○○에게도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를 감안하여 월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향후 규정 정비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 ① 「복지규정」에 단기근로인력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규정을 두는 등 규정, 요령, 기준 등이 상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 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1) 단기근로인력(기간제) ○○○은 2020년 4월 입사하여 같은 해 6월 퇴사하였음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주의 요구

제 목 채무감면 및 채무분할상환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조 치 기 관 (재)경남신용보증재단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 ○○○○○에서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전채무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위변제<sup>1)</sup>된 보증채무<sup>2)</sup>의 이행을 위하여 「채무감면규정」 제2조 등에 따라 채무관계자<sup>3)</sup>에게 채무부담액을 감면 및 분할상환토록 하여 강제집행 등의 구상권행사를 유예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증재단 「채무감면규정」 제2조(채무감면의 운용원칙)에 따르면 채무감면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구상권회수에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하되 감면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고, 채무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감면요청서”를 제출받고 채무감면 요청사유의 타당성, 채무관계자의 실익 있는 재산의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감면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주채무자 및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무감면은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한 채무감면으로 보아 채무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감면여부를 검토,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1)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2) 주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종적인 채무

3)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또한 보증재단 「채무감면규정」 제10조(분할상환 허용조건 및 조건변경 등) 및 제13조(기한의 이익상실<sup>4)</sup> 및 회복)에 따르면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토록 할 경우에는 “채무분할상환약정서”를 징구하고, 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채무관계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며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 등 구상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20일 전에 채무관계자에게 최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증재단 ○○○○○에서는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감면요청서를 제출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무분할상환약정서를 징구하여 분할상환토록 하여야 하며, 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일 20일 전에 최고통지 후 기한 이익을 상실시켜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가. 채무감면요청서 없이 채무감면 결정

그런데도 보증재단 ○○○○○에서는 2019. 2. 25.부터 2019. 6. 19.까지 ○○○○○○○○○ 등 5개 업체의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감면요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표 1]과 같이 채무액 42,541천 원 중 26,982천 원을 감면시켜 주었다.

[표 1] 채무감면요청서 없이 채무감면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업체명	채무관계자	감면결정일	채무액	감면액	감면후약정액
	계			42,541	26,982	15,559
1			'19.3.25.	11,099	6,299	4,800
2			'19.4.8.	10,551	5,553	4,998
3			'19.5.31.	1,785	824	961
4			'19.6.19.	6,787	4,787	2,000
5			'19.6.19.	12,319	9,519	2,800

[출처 : 보증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4)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

## 나. 채무분할상환 기한 이익 상실 등 미조치

또한 [표 2]와 같이 ○○○○ 등 2개 업체의 채무관계자에게 채무분할상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않고 채무를 분할상환토록 하였고, ○○○ 등 22개 업체의 채무관계자가 2021. 12. 10.부터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22. 5. 24. 감사일 현재 기준으로 최소 93일에서 최대 166일까지 연체가 발생하였는데도 기한의 이익 상실일 20일 전에 20개 업체의 채무관계자에게 최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 등 22개 업체 채무관계자의 채무기한 이익도 상실시키지 않는 등 구상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2] 채무분할상환미약정 및 연체 현황(2022. 5. 24. 기준)

(단위 : 천 원)

연번	업체명	채무 관계자	채무액	분할 회수	상환시작 (예정)일	연체 시작일	연체 일수	약정서 징구	최고 통지	이익 상실
1			9,774	33	'19. 6.20.	'22. 2.21.	93	○	×	×
2			12,507	60	'19. 6.26.	'22. 1.25.	120	○	×	×
3			45,249	45	'19.11.29.	'22. 2.10.	104	○	○	×
4			56,976	163	'20. 1.30.	'21.12.27.	149	○	×	×
5			7,685	39	'20. 3.17.	'22. 2. 7.	107	○	×	×
6			25,102	63	'20. 5.29.	'22. 2. 3.	111	×	×	×
7			5,600	22	'20. 6.30.	'21.12.27.	149	○	○	×
8			15,000	58	'20. 7.10.	'22. 1.25.	120	○	×	×
9			5,500	26	'20. 9.10.	'22. 1.25.	120	○	×	×
10			13,009	66	'20. 9.11.	'21.12.10.	166	○	×	×
11			3,600	17	'20. 9.15.	'21.12.27.	149	○	×	×
12			6,600	20	'20. 9.28.	'22. 1.25.	120	○	×	×
13			6,658	21	'20.11.30.	'21.12.27.	149	○	×	×
14			5,822	30	'21. 1.19.	'22. 2.21.	93	○	×	×
15			11,092	111	'21. 2.10.	'22. 2.10.	104	○	×	×
16			31,472	105	'21. 3.20.	'22. 2.21.	93	○	×	×
17			7,887	37	'21. 4. 5.	'22. 2.10.	104	○	×	×
18			5,500	55	'21. 6. 8.	'21.12.10.	166	○	×	×
19			63,648	182	'21. 6.21.	'22. 1.21.	124	○	×	×
20			2,002	10	'21. 9.21.	'22. 2.21.	93	○	×	×
21			6,117	31	'21. 9.28.	'22. 1.28.	117	○	×	×
22			10,310	42	'21.10.20.	'22. 2.21.	93	○	×	×
23			70,690	142	'21.11.25.	-	-	×	-	-

[출처 : 보증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보증재단에서는 감사결과를 수궁하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 ① 보증재단 「채무감면규정」 제2조 등을 위반하여 채무감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및 실무책임자 ○○○○○ ○급 ○○○(현 ○○○○), 감독책임자 ○○○○○ ○급 ○○○(현 ○○○○)과, 채무분할상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및 실무책임자 ○○○○○ ○급 ○○○, 감독책임자 ○○○○○ ○급 ○○○을 「직원상벌규정」 제24조 제2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조 치 기 관 (재)경남신용보증재단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고 한다)에서는 재단 「여비규정」 제9조 등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이하 “직원”이라고 한다)에게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증재단 「여비규정」 제9조(지급기준)에 따르면 직원이 국내에 출장할 때의 항공임, 철도임, 선임, 자동차임,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표 1]과 같이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0조(항공임, 철도임, 선임 및 자동차임의 지급)에 따르면 항공임, 철도임, 선임 및 자동차임은 실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분	항공임	철도임 <sup>1)</sup>	선임 <sup>2)</sup>	자동차임 <sup>3)</sup>	일비	숙박료	식비
임원	실비	실비 (1등급)	실비 (1등급)	실비	20,000	실비	25,000
1급 이하	실비	실비 (2등급)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외 지역 50,000)	20,000

[출처 : 보증재단 「여비규정」]

- 1) 1등급은 특실, 2등급은 일반실을 말하며 해당 철도임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임 적용
- 2) 국토해양부장관 인가요금 기준
-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 기준

그리고 「여비규정」 제14조의2(출장여비의 정산)에 따르면 출장여비는 출장지에서 사용한 숙박이용 영수증, 출장 시 이용한 교통이용 영수증 사본,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출장지에서 사용한 기타영수증, 출장복명서 중 하나 이상을 제출 받아 정산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증재단에서는 출장자에게 철도임 등의 운임을 실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교통이용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 받아 실제 소요된 국내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보증재단에서는 「여비규정」 제14조의2를 출장지에서 사용한 기타 영수증 등을 하나 이상만 제출하여도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교통이용 영수증 사본이 없는 경우에도 운임을 지급하였고, 당초 교통편과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거나 교통편 확인이 불가<sup>4)</sup>한 경우 등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2019. 1. 23.부터 2021. 11. 22.까지 실제 소요된 금액과 다르게 총 79건, 1,626,560원의 운임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2] 운임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지급 건수	정산액(A)	실제 소요액(B)	부적정 지급액(A-B)
계	79	6,515,200	4,888,640	1,626,560
2019	52	4,121,300	3,128,640	992,660
2020	20	1,912,700	1,431,600	481,100
2021	7	481,200	328,400	152,800

[출처 : 보증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4) 출장 사실은 확인되나 출장 시 이용한 교통편 확인이 불가한 경우 버스요금으로 운임을 지급함

## 관계기관 의견

보증재단에서는 「여비규정」 제10조에 따라 운임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같은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출장여비를 정산할 시 출장지에서 사용한 기타 영수증 등을 하나 이상만 제출하여도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고 착오 해석하여 실제 소요된 금액과 다르게 운임을 지급하였다고 감사결과를 수용하였다.

또한 이 건의 책임은 국내여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에 있으며, 향후 직원 교육 및 관련 규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며 감사결과를 수용하였다.

## 조치할 사항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 ① 보증재단 「여비규정」 제10조 등을 위반하여 국내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당시 실무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 ○급 ○○○(현 ○○○)을 「직원 상벌규정」 제24조 제2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보증재단 「여비규정」 제10조 및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한 국내 여비 1,626,56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